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6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. 5.

발 의 자 : 金炳旭 · 강민국 · 곽상도
권명호 · 권은희 · 김도읍
김승수 · 김 웅 · 김은혜
김정재 · 김태호 · 김태흠
류성걸 · 박완수 · 배준영
송언석 · 양금희 · 유의동
윤두현 · 윤희숙 · 이명수
이 영 · 이 용 · 이종배
이종성 · 정운천 · 정진석
정찬민 · 주호영 · 최춘식
추경호 · 하태경 · 허은아
황보승희 의원(3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증가했고,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인원 213명 중 가해자의 80%가 부모로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.

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. 이는 학대 현장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 따른 출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.</u> <u>⑧ 제7항에 따른 출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.</u>